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체계 강화... 법적의무·처벌기준 확대

중기부, '혁신기술 보호·구제 방안' 기술 요구·제공 협상, 법적 의무 강화 및 장관 "최소 4배이상 손해액 현실화"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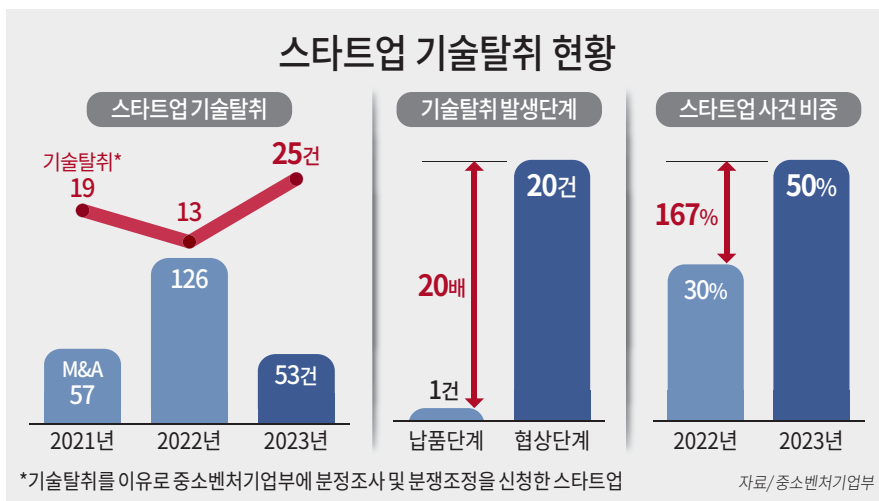
특히 협상·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술탈취 범위반행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세를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숨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

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범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욱 높인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범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 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용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애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영섭 "혁신·인재가 기업 지속성장 이끈다"

(KT 대표)

KTU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조직 성장 이끄는 리더십·인재 경영 AI·클라우드 협력으로 글로벌 도약

"경영의 기본은 변동(變通)입니다.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리더며 경영자는 덕과 인을 갖춘 기인이 되어 합니다."

김 대표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인재 중심 경영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KT의 조직개편 기조와도 맞아떨어졌다. KT는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KTU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가 16일 열린 KTU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다. 이날 포럼에는 김원규 KTU 비즈니스 포럼 서울 회장, 박광범 KTU 비즈니스 포럼 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신문 대표, 추교관 유니텍 대표 등 경북대학교 출신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해 조직운영관리를 주제로 정보를 교류했다.

이날 김 대표는 조직관리의 핵심으로 혁신과 사람을 꼽았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최근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한 것도 이러한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T는 지난 6월 MS와 AI·클라우드·IT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는 글로벌 생성 AI 시장 강자로 꼽히는 MS가 국내 기업과 AI 프로젝트로 손잡은 첫 사례다. 회사는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발전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계가 혁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계는 도구일 뿐, 이를 활용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람이고 결국 혁신

에는 인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를 발굴해 조직문화에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도 인재를 꼽았다.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임직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훌륭한 리더가 있는 조직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혁신은 한 명의 리더나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인재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시행 전망"

>> 1면 '금리 내리자...'서 계속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가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9월 셋째주부터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둔화세가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매수심리 강화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세가 보인다"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 가계대출도 재차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도 더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DSR에 전세·정책대출 포함 유력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을 지역, 소득, 주택여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출을 요청했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에 전세·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규제는 매년 갱신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DSR 적용대상은 유주택자인 임차인

의 전세대출(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의 경우 소득·지역 요건이 간간해질 수 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원으로 전달보다 2조4000억원 줄었지만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달(3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8월 최대 0.4%p 금리를 올렸음에도 수요가 여전히 많다. 충족 요건 수준을 좁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장인화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화 속도내야"

(포스코 회장)

세계철강협회 신임 집행위원 선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되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펼쳤다. 장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으로서 저탄소 기술·제품 개발, 환경, 안전과 관련한 세계철강협회의 운영 정책 및 방향 등을 결정한다.

16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글로벌 철강사 CEO(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이해와 이익 증진 활동을 목표로 하는 철강업

계 대표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는 물론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5개 회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5일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세계철강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된 장 회장은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환경 ▲안전 등 세계철강협회 운영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장 회장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탄소 철강 제조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회 주도로 추진 중인 탄소배출량 측정방식의 글로벌 표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